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

섬개발 사업 등 민자 대책있나 F1대회 의혹 조사특위구성을

전남도의회는 26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번 도정질의에는 이부남(민주·완도)·국영애(우리·비례)·고송자(민노·비례)·남기호(민주·광양) 의원 등 4명이 나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둘러싼 의혹 해소 등을 촉구했다.

◇개발·팽창 위주 도정, 내실 다져야 = 열린우리당 국영애 의원은 "전남도가 지난 2004년 이후 추진중인 5대 주요 개발사업에 모두 41조8천여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돼 있지만 이 중 유치해야 할 민간자본은 40조6천억원으로 평균 9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섬 관광자원 개발이 섬의 특색과 환경을 되래 망치는 경우도 있다"며 섬관광자원 4대 클러스터 가운데 하나인 사도·남도지구를 예로 들었다. 지난 2005년 12월 기공식을 가진 사도~남도 인도교는 천연기념물 공룡화석지 때문에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고, 태초 자연의 신비를 만끽할 수 있는 사도의 돌담길은 돌담만 남기고 파헤쳐져 보도블럭과 경계석으로 흉물스럽게 치장됐다는 것이다.

국 의원은 신안 다이아몬드도에 추진 중인 야생동물복원공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발매기 거래 농민 피해 대책=민주노동당 고송자 의원은 "지역 주요 농산물인 배추와 수박, 양파, 대파 등은 유통량의 60~80%가 발매기로 거

러되고 있으나 농가들이 구두계약에 의존, 가격 등락시 일부 약덕 상인들이 의한 일방적 계약파기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있다"며 표준계약서를 작성성 능가에 보급하고, 수집상인들은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읍·면에 등록하도록 해 농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1 대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 고 의원은 또 "F1 대회를 추진했던 전남도의 연구용역보고서와 비교해 입찰료 수입은 비슷한데 스폰서·식음료·부스 등에서 전남은 275억원, 경남은 43억원으로 각각 잡아 6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지난 2월에 체결한 KAVO와 FIA의 계약서 공개와 함께 F1 대회를 둘러싼 각종 문제의식에 대한 검증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학속 운영 개선=민주당 이부남 의원은 "인재 육성을 위해 화순 영남리에 운영 중인 전남학속 입학생 300여명의 대부분은 광주 시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며 학속이 화순에 위치해 통학에 불편이 크므로 광주시 매곡동에 있는 전남도공무원교육원이 향후 장흥대학으로 이전할 경우 전남학속을 그 자리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대책=열린우리당 국영애, 민주당 이부남·남기호 의원 등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대책안 마련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F-1 의혹 있을 수 없다"

박준영 지사 답변

박준영 전남지사는 고송자 의원의 F1사업 관련 문제 제기 등에 대해 "F1 대회는 각종 행정절차와 도의회 승인을 얻어 시작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선도사업"이라며 "전남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나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지사는 또 "대안 없이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 도는 물론 국가의 이익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

박했다.

유창중 기획관리실장은 국영애 의원의 내실 있는 도정 운영 및 예산편성때 주민참여 제도와 요구에 대해 "도정 평가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에 주력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공기업 임금 멋대로 못 올린다

단체협약 기획처 보고해야...휴가비·경조사비 확대 차단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금 뿐 아니라 복리후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복리후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안전이 이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은 임금 인상 외에도 휴가비·수당·경조사비 등을 지나치게 늘리고 사원 자녀들에게는 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에 이사회 안건 통보해야 하며 기획처 장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를 비상임이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지침을 확정, 해당 기관들에게 보냈다.

경영지침은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운영되도록 했다.

이사회 의장은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 이사회 구성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회가 보다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들에게 기관의 경영사정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임금인상은 물론, 복리후생을 통해 사실상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안전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특히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 휴가 확대, 지나친 조위금, 수당의 신설, 채용에서의 혜택 등에 대한 감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동안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회의 당일에 안건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하고 "앞으로는 기획처가 이사회 안건 가운데 문제점을 비상임이사에 미리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안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

장과 임원의 평가에 방만경영 사례를 적극 반영하는 등 방만경영에 대한 사후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북, BDA측과 송금 협의중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문제와 관련, 대표단을 구성해 BDA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은 또 52개 계좌에 있는 2천500만 달러의 자금을 한두개 계좌로 모은 뒤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3국 은행이 임금에 동의할 경우 BDA 문제가 빠르면 이번주말이나 내주중 해결국면으로 들어가는 한편 북한이 2.13 합의에서 약속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방북 등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여권, 선거결과에 웃을수 있나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해는 지고, 비는 오고, 망태는 벗겨지고, 바지는 내려가고..."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조급한 상황을 얘기할 때 시골에서는 소 풀 배려했다가 맞게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빗대곤 한다.

현재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범 여권의 상황은 이와 다를바 없다. 대신은 다가오는데 대통합은 지지부진하고 범 여권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는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을 보자.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후보를 내는데 그친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물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심이 떠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선거였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5월초 2차 탈당설이 확산되고 있으며 늦어도 5월 말에는 당이 사실상 해체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17대 국회 초반 개혁의 '완장'을 차고 목소리를 높였던 열린우리당의 참담한 현실이다.

대통합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열린우리당을 뺀채 나온 탈당 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약한 탈당 명분으로 여론의 반대에 시달리던 통합신당모임은 타계적으로 민주당과의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했으나 주도권 갈등만 노출시켰을 뿐 불발에 그쳤다.

결국 독자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다는 탈당 당시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만의 정당'을 만들고 있다. 중도통합신당모임 소속 모 의원은 "우시장의 소매치기 팔리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장배 의원이 주축이 된 민생정치모임도 딱하기는 같다. 출범 초기, 잠깐 주목을 받았지만 때늦은 정장배 의원의 FTA 반대 단식 등으로 정치권의 관심사에서 멀어진지 오래다.

여기에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답답하고 힘겹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오락가락 행보로 '제2의 고건'이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으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여론의 시베리아 벌판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도 많았어 뚝뚝뚝 걸어간다고는 하지만 지지율은 4~5%대에서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총체적 난국에 대해 범여권 인사들은 적절한 시기와 상황이 되면 대통합이 이뤄지면서 극적인 정권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지난 2002년 대선의 추억에 빠져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와 상황은 기다려서는 오지 않는다. 희생과 결단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인사들의 희생 없이는 대통합의 시기는 더욱 멀어질 것이며 정권 창출도 막연한 기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tuim@kwangju.co.kr

정·관·재계 넘나든 'TK의 대부'

타계한 신현확 前총리는

격변 한국 현대사 증인

26일 타계한 신현확 전 국무총리는 제1공화국 탄생에서부터 5공화국 출범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를 정계와 재계, 관계를 넘나들면서 생생하게 목도한 산증인이었다.

신 전 총리는 12·12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에 정승화 육참총장의 연행을 사후 재가하는 현장을 직접 지켜봤고, 1980년 '서울의 봄' 때에는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가결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역사의 현장 한 가운데 있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TK(대구·경북)의 대부'라는 별명에 걸맞게 정계인사들과 교류를 이어나갔고, 80년대 중반에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로도 활약했다.

1979년 10·26 이후 국무총리로 임명된 그의 행적에 대해서 당시부터 평가가 엇갈렸다. 80년 서울의 봄 당시 그는 최규하 대통령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26일 타계한 신현확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76년 2월 보사부장관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뒤에 차지철 경호실장도 보인다.

/연합뉴스

개헌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사를 표현해 여론의 관심 대상이 됐고, 이에 따라 그가 신군부와 야합했다거나 독자적인 신당을 창당하려 한다는 등의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검찰의 12·12 수사과정에서는 그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직 겸직을 반대하는 등 신

군부의 무리한 요구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1986년엔 삼성물산 회장으로 임명돼 '이건희 회장 체제'의 기반을 닦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지난 1988년엔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력자원부 폐지 등 개혁안을 입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Party Food Industry (파티외식산업) featuring a variety of food items and services. Text includes: '전남·북 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개업식·기념식', '시외·시내 출장전문', '체육대회·아유회', '식탁·의자 무료지원', '연회장 주차장 완비'. Contact info: 226-0085~7.

Advertisement for Imperial Hybrid Casual restaurant. Text includes: 'IMPERIAL HYBRID CASUAL', '세정아울렛 2층 임페리얼 광주상무점 OPEN', 'EVENT 봄·여름 신상품 30~50% SALE (일부품목제외)', '햇살이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계절. 하이브리드 캐주얼 임페리얼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삶의 맛을 즐기는 당신에게 감성 만족의 브랜드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이름, 임페리얼 그 주인공의 고귀함을 만나고 싶습니까.' Contact info: 062)384-8800.